

법사위, '尹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준비

오늘 실시계획서 채택 의결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는 보류

“국회 상황 따라 동시추진 가능”

야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준비 절차에 돌입한다.

법사위는 8일 공지를 통해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각각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청원에서 언급된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총 5개로, 해당 자료들을 확보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를 고려해 미리 관련 절차들을 밟아놓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 6월 2일 시작됐으며, 이날 기준 참여자는 130만명을 넘어섰다.

민주당은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한 만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의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청문회 등 자체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여기에는 실제 대통령 탄핵안 발의 여부와는 별개로, 청원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법사위 심사 자체를 대외 공세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 안팎에선 핵심 증인들을 불러세울 청문회는 빨라도 이달 말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청원 기간이 7월 20일까지 계속되는 데다 청원소위와 전체회의의 심사 절차 등을 고려하면

청문회 시점은 8월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를 하고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등 조사 일정 논의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당초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검사 4인에 대한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격적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검사 탄핵소추안보다는 대통령 탄핵 청원 건을 우선순위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후 국회 상황에 따라 검사 탄핵 건도 동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는 탄핵안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고 이를 다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수사 외압, 검찰의 특활비 부정 사용 사건'에 대한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재위 '세수결손' 공방...“대외여건 때문” “부자감세 탓”

최상목 “부자 위한 감세 아냐”

여야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세수 결손'의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국면 등 여러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법인세가 많이 걷히지 않은 탓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현 정부의 '부자감세'가 세수 결손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세수 핑크는 반도체 위기, 공급망 위기 등 여러 대외적 일들 때문에 법인세가 많이 걷히지 않은 탓”이라며 “세수 핑크가 왜 났는지와 (결손 원인) 현재는 좋아지

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홍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은 “현 정부는 2년 넘게 인플레이션 국면을 관리해 오면서 연착륙을 노력해왔다”면서 “금리가 높고 연착륙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성장률이 높을 수 없고, 법인세도 잘 걷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2022년부터 경기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도 정부는 재정 긴축과 감세라는 경기 상황과 어긋나는 재정 정책을 펼쳤고, 작년에는 1.4%라는 역대급 저성장을 기록했다”며 “세수 실적이 악화하면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를 전면적으로 펼쳐야 하지만,

윤 정부 들어 지난 2년간 늘어난 국세 감면액만 13조6천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광현 의원은 “윤 정부는 왜 자꾸 불공정, 불합리한 부자 감세로만 가려고 하느냐”며 “세수 확보 방안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선심성 감세정책 행진을 벌이고 있는 정부를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민주당의 '부자감세' 비판에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경제 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무도한 역사 왜곡 시도 저지 희생자·유족들 명예회복·보상 전력투구”

주철현 여순사건 진상규명 특위 위원장



자료수집과 분석을 모조리 외부용역에 맡기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주철현(여수갑·사진) 위원장은 8일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역사 왜곡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고, 희생자와 유족분들의 명예회복은 물론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 전력투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2021년에 '여순사건법'이 73년 만에 제정돼 유족들과 함께 환호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며 당시의 환호가 실망을 넘어 분노로 바뀌었다”며 “어느새 여순사건의 유족분들도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이데, 윤석열 정권은 귀중한 시간을 너무나 많이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여순사건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편파적인 역사 인식의 극우·보수 성향 인물 일색으로 채웠고, 최소한의 전문성마저 결여된 작성기획단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히 주 위원장은 “여순사건법에 따라 설치된 작성기획단이, 여순의 아픔을 치유하기는커녕, 역사 왜곡에 앞장서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짓밟는 형국이다”며 “작성기획단의 역사왜곡 시도에 적극 대응하고, 여순사건법을 제대로 개정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는 이재명 전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여순사건 역사왜곡에 대응하여 지난 5월 17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설치하고, 위원장에 임명된 주철현 의원을 포함해 여순사건이 발생했던 전남 동부권의 국회의원들로 특위를 1차 구성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공직선거법 이어 위증교사 재판도 9월말 마무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9월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 “9월 30일 (피고인의)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종 진술 등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오는 22일과 다음 달 26일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전 PD와 함께 기사를 사칭해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의혹을 취재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양부남, 보이스피싱 인출 차단 법률안 발의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사기 피해금 인출을 원천 차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사진)은 8일 기존에 거래 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의 자금이 입금될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의 예금 인출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토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법률은 금융회사가 자체점검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을 때, 출금 제한 등의 임시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자체점검 특성상 이미 수차례에 걸친 자금 인출이 이루어진 이후에 임시조치를 취하게 되는 등 신속한 피해 예방에 어려움이 뒤따라 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판단 없이 의무적으로 출금 제한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임시조치 이후 금융회사는 입금받은 계



좌 소유주를 상대로 금융회사에 이미 등록된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본인 확인 조치 후, 출금 제한을 해제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양 의원은 “매년 5000억 원 가량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선 경찰관과의 수차례 면담을 했고, 범죄조직의 예금 인출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고리를 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법 시행 초기에는 일부 국민께서 1000만원 이상 거래의 본인확인 조치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첫 거래에만 한정된 것이고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으므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